

역사적 사건과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최준영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를 결정지었던 역사적 사건과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의 인지 정도와 가치관을 다루고 있다. 분석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우리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접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건(운동)의 시점이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았다. 특히 각 사건의 발생연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 할 정도로 틀린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각 운동이나 사건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발생연도 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및 북한관련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유사한 시기에 나온 성인 대상 통일여론조사 결과와 대비하였을 때, 큰 차이점은 없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는 성별 차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교등급별(초/중/고)로는 학년이 높아갈수록 발생연도 및 사건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지역별로는 사건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다. 3·1 운동의 경우 대구와 경북, 제주 지역에서 발생연도 및 성격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반독재 학생혁명인 4·19의 경우에는 제주, 전남 지역 학생들이 그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특히, 5·18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발생지역인 광주와 전남의 청소년들이 타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 인식, 역사적 사건, 3·1 운동, 5·18, 4·19, 5·16, 6월 항쟁, 통일, 북한

1. 들어가는 말

해방 이후 한국 근대사의 전환기를 보면 항상 당시 사회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정부 수립에 이어 1960년까지 지속했던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부패와 독재에 항거한 4·19 학생운동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4월 혁명의 뒤를 이은 민주당 정권(제2공화국)은 채 1년도 가지 못하고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졌다. 1963년에 출범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의 새로운 헌법이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헌법 개정에 착수하고 경제발전의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였다(문지영, 2006). 제3공화국은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군부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리라는 기대에 차있던 국민들에게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등장은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항거를 불러왔고, 급기야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제공하였다. 전두환 정권 후기에 이르러 사회 각 분야에서 정권퇴진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를 무시하는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전의 저항운동은 주로 조직을 갖춘 대학생들이 주도했다면 80년대의 저항운동은 사회 각층에서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5·18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비록 신군부의 무력진압으로 실패한 운동이 되고 말았지만,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외에도 노동자, 시민, 여성 등 다양한 민중들이 참여한 저항운동이다. 이후 우리 사회의 저항 운동은 대학생만의 점유물만이 아닌, 그 누구도 요구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운동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급기야 전국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봉기하여 1987년의 6월 대규모항쟁을 일으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사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비상 카드를 제시하여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6공화국을 탄생시켰다.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을 너무 간단히 언급한 것 같지만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기에(김동택, 1992; 윤성이, 1992; 문지영,

2006) 각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피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정치의 전환점은 국회나 행정부 내부의 자발적인 변화, 혹은 지배 엘리트 집단의 교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또한, 해방과 정부 수립을 제외하면 외세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일제 하 3·1 운동을 위시하여 변혁을 주도했던 세력은 민중이었지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특정 지배 엘리트 집단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가 아니면서도 수혜자로 등장하게 된다. 5·16을 제외하면 우리 정치사는 민중의 저항에 의해 지배세력이 바뀌고, 헌법이 바뀌고, 국가 정체가 바뀐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특정 권력 혹은 이익집단을 언급할 때, 4·19세대, 5·16세대, 63세대, 386 세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저변에는 이들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세대들이고 여기서 탄생한 엘리트들이 정권의 핵심으로 편입되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된 이래 우리 정치사에서 항상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던 것이 남북관계이다.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상이한 이데올로기로 60여년 이상을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대북정책을 취하느냐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였다. 특히 단일민족임을 중시하는 우리 국민은 정부가 북한을 포용하든 적대시하든 통일을 언젠가는 꼭 달성해야 할 절대적 명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 예로, 2006년 12월에 실시한 ‘국민통일의식 정기여론조사’를 보면(평화문제연구소, 2007.) 전국의 성인 중 63.4%가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매우 중요하다 38.5%, 중요하다 24.9%). 부정적 의견은 9.3%에 불과하였다(별로 중요하지 않다 7.0%, 전혀 중요하지 않다 2.3%).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를 결정지었던 역사적 사건과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의 인지 정도와 가치관을 다루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우리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접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건(운동)의 시점이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은 많지 않았다. 특히 각 사건의 발생연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 할 정도로 틀린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각 운동이나 사건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발생연도 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및 북한관련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유사한 시기에 나온 성인 대상 통일여론조사 결과와 대비하였을 때, 큰 차이점은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학교등급별(초/중/고), 성별 등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볼 것이다. 특히, 5·18 관련 조사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도표를 제시하여 지역별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그 지역의 정치적 성향과 청소년들의 의식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2004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것이다. 이 조사의 개략적인 분석결과는 2007년 3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김순홍 외 2007a, 2007b, 2007c). 이 연구에서는 각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외에도 위 저서에 언급되지 않은 지역별 비교(광역시도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 1) 조사대상: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 2) 조사방법: 슈퍼바이저의 설명과 진행에 따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3) 조사 학교 및 학생수: 초등학교 117개교, 중학교 120개교, 고등학교 230개교(전체: 467개교). 초등학생 3,542명, 중학생 3,687명, 고등학생 6,638명(전체: 13,867명)을 조사하여

지역별 초·중·고생의 비율에 맞추어 가중치를 조정하였다(초 5,050명, 중 4,540명, 고 4,277명(전체: 13,867명)).

- 4)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무선층화집락표집(multi-stage stratified random cluster sampling)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및 학교 급별(초·중·고), 설립별(공립, 사립), 학교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구분된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5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학년 한 반씩을 집락으로 선정하여 전원을 조사하였다.

- 5) 표본오차의 최대허용한계 : 95%신뢰수준에서 $\pm 0.82\%$

조사에 포함된 응답자의 간략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권역별(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지역별(광역시 및 도 등 광역자치단체) 특성별 구별은 분석에 필요한 경우 따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합 계	
		응답자수	비율
전체		13,867	100.0
성 별	남자	7,230	52.3
	여자	6,637	47.9
학 교	고등학교	4,277	30.8
	남자	2,168	15.6
	여자	2,109	15.6
	일반고	3,041	21.9
	남자	1,573	11.3
	여자	1,468	10.6
	실업고	1,236	8.9
	남자	595	4.3
	여자	641	4.6
	중학교	4,540	32.7
	남자	2,367	17.1
	여자	2,173	15.7
	초등학교	5,050	36.4
	남자	2,695	19.4
여자	2,355	17.0	

3. 역사적 사건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분석을 수행하면서 따로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연구가 특정한 가설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표본수가 크다 보니 아래에 제시되는 거의 모든 비교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수치나 표를 장황하게 삽입시켜 가독성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런 이유로 항목별 분석에서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따로 표를 제시하였다.

1) 3·1 운동

이 연구에서 분석한 역사적 사건 중에서 3·1운동은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발생연도(1919년)는 거의 모든 청소년이 알고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3·1운동의 발생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4.5%에 불과했다. 틀리게 알고 있는 학생은 7.6%, 그리고 대다수인 76.0%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85%가 3·1운동의 발생연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성별 차이는 별로 없었으나, 학교등급별로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었다(고등학교 27.7%, 중학교 17.1%, 초등학교 1.1%). 광역시도별로는 제주도(23.1%)와 대구(20.0%)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전북(10.7%)과 경기도(11.5%)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3·1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48.4%였으며, 모른다는 학생이 45.5%로 나타났다(틀린 응답 6.0%, 무응답 0.7%). 이 역시 우리의 예상과 크게 빗나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위 3.1절이라는 국가기념일 및 국경일로 지정되어 매해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발생연도에 대한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성별 차이는 별로 없었으며, 학

고등급별로는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이 고등학생 72.7%, 중학생 54.8%, 초등학생 22.0%로 나타나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56.1%), 경북(54.4%) 등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39.1%) 학생들이 3·1운동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 4·19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국가기념일 중 하나인 3·1 운동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이 정도라면 나머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더욱 낮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4·19는 예전 군사정권이 '의거'라는 표현으로 폄하한 바 있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4·19 혁명으로 인정을 받아 나름대로 정체성을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3·1운동이나 여타 사건처럼 정부나 민간단체의 대대적인 행사나 홍보활동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지도 역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19의 발생연도(1960년)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2.3%에 불과했으며, 틀리게 알고 있는 학생이 4.0%, 그리고 91.7%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다. 성별차이는 없었으며, 학교등급별로는 초등학교(0.2%), 중학교(1.4%), 고등학교(5.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인 비율이 너무 낮아 1~2%의 차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재에 항거한 학생운동으로서 4·19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8.4%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틀리게 알고 있음 16.4%, 모르겠다 64.6%). 의미를 알고 있는 비율만 보면 성별차이는 약간 있었으며(남학생 20.8%, 여학생 16.4%), 학교등급별로는 초등학생 3.3%, 중학생 16.7%, 고등학생 38.0%로 커다란 등급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제주(24.6%), 전남(22.9%), 대전(21.3%) 순으로 나타났고, 3·1운동과 마찬가지로 강원도(13.7%) 학생들이 4·19의 의미를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3) 5·16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달리 5·16은 다수의 민중이 참가한 운동이나 봉기가 아니라 일종의 군사정변, 즉 쿠데타이다. 예전 군사정권에서는 이를 혁명으로 규정하여 국가적인 행사를 치렀으나 김영삼 정부가 이를 군사 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 기념일로 따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거국적인 행사도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지도도 낮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분석 결과 5·16이 일어난 해(1961년)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0%에 불과했다(틀린 응답 2.9%, 모르겠다 94.0%). 따라서 여타 집단별 분석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11.1%로 발생연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5·16의 군사정변적 성격을 알고 있었다(틀리게 알고 있음 15.0%, 모르겠다 73.2%). 특히 여학생(7.1%)에 비해 두배 가까운 남학생(14.1%)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학교등급별로도 여타 역사적 사건처럼 등급이 올라갈수록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초등학생 1.1%, 중학생 7.8%, 고등학생 26.3%).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유독 제주도(18.8%) 학생들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4) 5·18

5·18은 4·19나 5·16과는 달리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희생자들의 묘지는 국립묘지로 지정을 받았다. 해마다 광주에서는 5·18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치르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광주를 방문하면 반드시 5·18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분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도 5·18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정치권 및 각종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심심찮게 5·18관련 보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정현, 문성근이 주

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 <꽃잎>(1996년)이나, 2007년에 이준기, 안성기 등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하여 8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던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그 실상과 의의가 일반 대중에게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화려한 휴가>는 세트 설치 및 영화 제작과정 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개봉 전부터 세인의 관심을 받았다. 따라서 4·19나 5·16에 비해 젊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쉬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상당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측할 만하다.

그러나 분석결과와 5·18 발생연도(1980년)에 대해 무려 92.5%의 청소년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뜻밖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발생연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인 2.1%에 불과했다(틀리게 알고 있음 3.4%).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었다. 학교등급별로는 역시 학년이 높아갈수록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초등학생 0.3%, 중학생 1.9%, 고등학생 4.5%). 가장 흥미있는 결과는 지역별 인지도인데,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아래의 <표 2>는 주요 지역별 인지 비율을 종합한 것이다.

<표 2> 주요 지역별 5·18 발생연도 인지 비율(%)*

	합계		제대로 알고있음	틀리게 알고 있음	모르겠다	무응답
	%	응답자수				
전체*	100.0	13,867	2.1	3.4	92.5	3.1
서울	100.0	2,633	.9	4.9	91.2	.9
부산	100.0	1,021	1.3	3.5	93.9	1.3
대구	100.0	779	.5	2.2	95.8	1.6
인천	100.0	811	1.2	2.7	95.5	.6
광주	100.0	457	11.2	6.4	80.8	1.7
대전	100.0	450	1.4	2.3	95.1	1.2
강원	100.0	415	1.0	2.0	95.3	1.7
전북	100.0	544	2.0	3.0	93.7	1.2
전남	100.0	579	7.3	6.2	84.5	2.1
경북	100.0	715	.7	2.4	95.6	1.3
경남	100.0	911	1.3	2.3	94.9	1.5
제주	100.0	163	3.7	3.5	89.4	3.3

* 위 지역 외의 지역(울산 경기 충남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 청소년들의 인지 비율이 11.2%, 전남은 7.3% 등인데 비해 대구(0.5%), 경북(0.7%), 서울(0.9%) 등은 1% 미만의 인지비율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5·18 발생지역인 광주 및 전남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지역은 틀리게 알고 있는 비율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광주 6.4%, 전남 6.2%), 틀렸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18 관련 정보에 노출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발생 연도를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연도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이다. 그 다음은 제주지역이 3.7%로 광주·전남에 비해 상당히 낮기는 하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5·18의 성격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체적으로 6.2%의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틀리게 알고 있는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모르겠다 68.1%).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등급별로는 초등학생 1.4%, 중학생 6.3%, 고등학생 11.8% 등으로 학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발생연도 인지도와는 달리 5·18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틀린 응답을 한 비율을 보면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위의 발생연도 인지비율과 유사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광주(52.5%)·전남(45.8%) 지역의 틀린 응답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5·18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시도했으나 정확한 응답이 나오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표 3>). 실제로 조사에서 제시한 범주가 대충 정확한 답을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5·18의 성격을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은 지역일수록 5·18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 지역별 5·18의 성격 인지 비율(%)*

	합계		제대 알고있음	틀리게 알고 있음	모르겠다	무응답
	%	응답자수				
전체*	100.0	13,867	6.2	25.1	68.1	.7
서울	100.0	2,633	6.9	24.4	68.1	1.4
부산	100.0	1,021	6.6	25.4	67.9	.2
대구	100.0	779	5.9	25.7	67.6	.8
인천	100.0	811	5.6	23.5	70.9	.0
광주	100.0	457	5.9	52.5	41.1	.6
대전	100.0	450	6.0	20.9	72.9	.2
강원	100.0	415	4.6	22.6	71.5	.7
전북	100.0	544	5.3	30.2	64.1	.5
전남	100.0	579	5.7	45.8	47.8	.6
경북	100.0	715	5.0	23.2	71.2	.6
경남	100.0	911	6.3	18.9	74.2	.6
제주	100.0	163	9.0	24.0	66.3	.7

* 위 지역 외의 지역(울산 경기 충남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이와 같은 논리에서 <표 3>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낮은 순으로 보면, 광주(41.1%), 전남(47.8%) 지역이 전국 평균 및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고, 그 다음은 제주도(66.3%)가 상당한 격차를 두고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은 순으로는 경남(74.2%), 대전(72.9%), 강원(71.5%), 경북(71.2%) 등으로 나타났다. 표에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율이 높은 지역은 이 외에도 충남(73.0%), 경기(71.8%) 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위의 5·18 발생연도에 대한 인지 비율과 비교적 일관성 있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 셈이다.

5) 6월 항쟁

5·18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운동으로 끝났지만 6월 항쟁이 5·18의 맥을 잇는 전국적 항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조치를 무너뜨리고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끌어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초석이 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여

타 사건과는 달리 특정한 날짜도 없고 운동의 주체라할 만한 집단이 너무 다양하다보니 오히려 그 정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이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월 항쟁이 일어난 해(1987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0%에 불과했다(틀리게 알고 있음 3.7%, 모르겠다. 92.2%). 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학교등급별 차이는 위에 언급한 사건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초등학생 0.0%, 중학생 0.5%, 고등학생 6.1%). 지역별로도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6월 항쟁의 의미에 대한 인지도는 이보다는 조금 높은 5.3%를 나타냈다(틀리게 알고 있음 22.6%, 모르겠다 71.3%). 성별로 보면 남학생(6.3%)의 비율이 여학생(4.3%)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12.3%)이 중학생(3.7%)이나 초등학생(0.8%)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앞의 역사적 사건들과 유사한 경향이 어느 정도 발견되었다. 인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10.0%), 제주(8.8%), 광주(7.6%), 부산(7.3%) 등이었으며, 인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3.1%), 충남(4.1%), 대전(4.3%), 강원(4.4%), 경북(4.5%) 등으로 나타났다.

4. 통일 및 북한 관련 태도

1) 통일에 대한 의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47.9%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9.5%는 통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모르겠다 11.4%, 무응답 1.2%). 이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성인대상 조사의 수치와 비슷하다. 민주평통·한국리서치가 2004년 말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평화문제연구소, 2004) 국민의 53.4%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관계로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36.4%로 이 조사의 청소년들의 응

답 중 통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응답율과 유사하다. 또한 1년 전에 치러진 전국 청소년 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순홍 외, 2004). 성별로는 남학생(53.9%)이 여학생(41.4%)에 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학교등급별로는 위의 역사적 사건과는 다르게 초등학교(66.2%) 가운데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중학생 37.5%, 고등학생 37.1%). 이는 어린 학생들은 현실적 제약이나 절차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응답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역별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46.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지원해야 한다 11.9%, 지원하는 것이 좋다 34.2%). 성별, 학교등급별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전남(60.2%), 광주(58.1%) 등은 긍정적인 답변이 전국 평균이나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충남(40.6%), 대구(42.0%), 충북(42.3%), 서울(42.5%)은 평균보다 낮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남 지역의 이 같은 결과는 2002년에 실시한 전남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전남교육청, 광주사회조사연구소, 2003)와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해야 한다 15.9% + 지원하는 것이 좋다 47.3% = 63.2%).

3) 북한에 대한 인식

과연 북한은 협력의 대상인가 아니면 적대적 대상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분단된 이후 끊임없이 대두되어온 문제다.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은 50.6%가 협력 대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16.9%는 적대 대상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모르겠다 32.4%). 2004년 12월 비슷한 시기에 타 연구(평화문제연구소, 2007)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북한이 포용하고 할게 살 상대라는 응답이 34.5%, 적이 자 함께 살 상대라는 응답 50.1%, 대치하는 적이라는 응답 9.1% 등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54.6%) 여학생(46.3%)에 비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교등급별로는 중학생(47.4%)보다는 고등학생(53.9%)이 높았다(이 질문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광주(59.2%), 전남(62.3%)의 경우 10명 중 6명 꼴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충남(43.6%)과 강원(44.%) 등은 평균을 상당히 크게 밑도는 응답을 보였다. 이 역시 당시 참여정부가 북한과의 경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광주·전남에서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맺는 말

이 연구에서 다룬 사건들은 우리 현대사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역사적 사건들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한국 현대사 혹은 한국의 민주화는 이 사건들을 통해 그 궤도가 수정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 밝혀졌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건들의 발생연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더군다나 정규 교과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충분히 학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될 여지가 있다. 사건의 의미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면 이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역사적 사건은 3·1운동이다. 14.5%의 학생들이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48.4%의 학생들이 운동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에 비해 큰 차이로 인지도가 낮아진다. 발생연도의 경우 4·19(2.3%), 5·18(2.1%), 6

월 항쟁(2.0%), 5·16(1.0%)의 순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운동이나 사건의 성격 인지도에서는 사건 간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는데 4·19(18.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16(11.1%), 5·18(6.2%), 6월 항쟁(5.3%)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옳게 답한 비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리게 답한 비율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틀리게 응답했다는 것이 단순한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무지하거나 평소 관심이 없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별로 보면 먼저 대부분의 사건 인지도에서 남녀간 차이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학교등급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건 발생연도 및 성격에 대한 인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 배우면서 점차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는 사건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가 달라지고 있었다. 3·1 운동의 경우 대구와 경북, 제주 지역에서 발생연도 및 성격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반독재 학생혁명인 4·19의 경우에는 제주, 전남지역 학생들이 그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특히, 5·18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발생지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은 학생들이 발생연도를 알고 있었다. 또한, 틀린 응답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5·18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발생연도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은 광주(80.8%), 전남(84.5%)인데 비해 타 지역은 거의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도 92.5%나 된다. 틀린 응답을 제시하는 것도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5·18의 성격에 대한 응답이다. 비록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모르겠다는 응답만 비교해 보면 광주(41.4%)와 전남(47.8%) 지역 청소년들은 전국 평균 68.1% 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은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응답 형태다. 제주지역의 경우 3·1운동 발생연도(23.1%), 4·19의 성격(24.6%), 5·16의 성격(18.8%), 5·18의 성격(9.0%), 6월 항쟁의 성격(8.8%) 인지도 등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제주지역이 저항운동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특히 4·3 사건과 같이 다수의 민중이 희생되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아픔과 지역적 소외감 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4·3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을 뿐 그동안 민란이나 폭동, 혹은 그냥 묻혀져야 할 사건으로 폄하되어 왔다. 현재도 그러한 인식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한 예로 5·18을 폄하하는 대표적인 논객 지만원(2008)의 경우 '5·18과 제주 4·3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다'라는 표현 등으로 두 사건을 폭도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역사적 사건들과 통일관련 의식을 같이 다루는 것이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분석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통일 및 북한관련 응답에서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성인 대상 수치와 유사한 결과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인 질문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북한이 협력 대상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나타났다. 강원, 충청 지역 등은 평균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고, 광주·전남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비교적 진보적 성향이 강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국 평균 및 여타 지역에 비해 15%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국평균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이 지역 경제와의 연관성이나 지정학적 특성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지역적 성향이 청소년들의 인식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사건과 북한 관련 설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역별 인식 차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Bronfenbrenner, 1989). 가정 환경 외에도 친구관계나 학교환경(Resnick et al, 1997), 이웃 및 주변(Brooks-Gunn et al, 1997) 등이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화의 기관으로 작용한다. 이는 투표 행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로씨(Peter Rossi, 1966)의 고전적 연구를 보면, 인성이나 태도 등과 같은 개인적 변수는 정당의 선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주변 환경과 전통적 성향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도 마찬가지다. 한번 형성된 정치적 성향은 고정관념처럼 일종의 관성을 가지고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최준영, 2000). 따라서 가정이나 주변의 정치적 성향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으면서 청소년들은 그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부분 그대로 남기 때문에 지역적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분석이 기술적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나 통일, 북한 관련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을 인과 모델로 설명하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사건들의 발생연도나 성격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예상 밖으로 낮은 이유, 지역적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고 약간은 피상적인 이론적 고찰에 머물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인식과 북한 관련 인식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시사한 점도 이 연구의 의의라고 본다. 즉,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역사적 사건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경험적 자료로 보여 준 것이다. 사용한 자료의 특성 상 더 이상의 분석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추후 연구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김동택. 1992. “한국사회와 민주변혁론: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정치연구회 사상분과(편), 『현대민주주의론 II』. 창작과 비평사.
- 김순홍 외. 2004. 『청소년생활 통계연보: 2004』.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순홍 외. 2007a. 『한국 청소년의 삶』.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순홍 외. 2007b. 『한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와 일탈행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순홍 외. 2007c.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문지영. 2006. “한국의 민주화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민주화 전망의 의미와 한계.” 『사회연구』. 11: 75-111.
- 윤성이. 1992.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 권위주의체제 변동.” 『한국정치학회보』. 32(4): 111-128.
- 전남교육청, 광주사회조사연구소. 2003. 『전라남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지만원. 2008. “12.12 ~ 5·18의 진실 ①”, 『한국논단(5월)』, pp. 74-93.
- 최준영, 김순홍. 2000. “지역간 거리감을 통해서 본 지역주의의 실상과 문제점.” 『사회연구』. 1: 65-95.
- 평화문제연구소. 2004. “국민 통일여론조사 보고서.” 『통일한국』, 254: 88-91.
- 평화문제연구소, 2007. “통일 여론조사 결과.” 『통일한국』. 278: 72-75.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187-249.
- Brooks-Gunn, J., Duncan, G. J. & Aber, J. L. 1997. *Neighborhood Poverty: Context and Consequences for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 Resnick, M. D., Bearman, P. S., Blum, R. W., et al. 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 823-832.

Rossi, P. H. 1966. "Trends in Voting Behavior." in E. C. Dreyer & W. A. Rosenbaum(eds), *Political Opinion and Electoral Behavior*, Belmont, CA: Wadsworth, pp. 67-78.

최준영은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 of Iowa)에서 사회심리학으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북일리노이대학교(Northern Illinois Univ.)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 분야는 사회심리와 청소년 문제, 지역 감정 등이다.

[2008. 12. 10. 접수; 2009. 2. 2. 채택]

